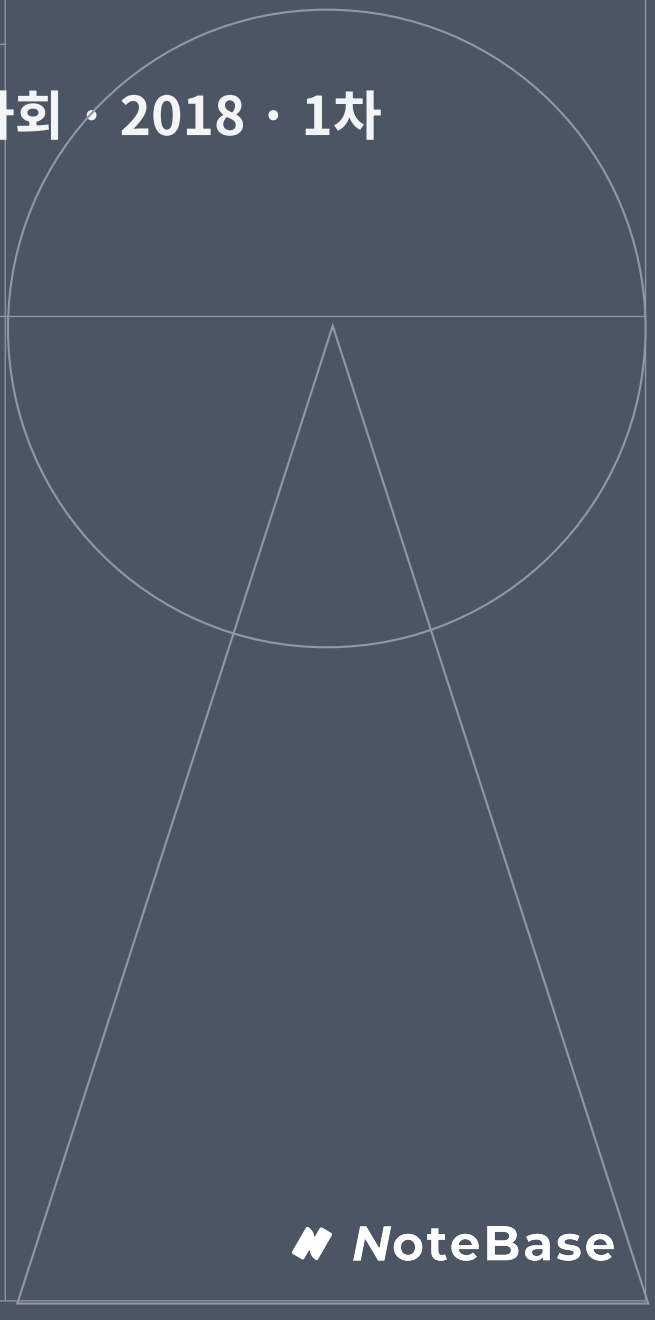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8 · 1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8 · 1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8 · 1차

문 1. 「헌법」에서 명시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②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다만,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대통령의
행정권·국민투표부의권·대통령령 발령권과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국민투표부의권 = 대통령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의 직접 투표에 맡길 수 있는 권한이다.
대통령령 =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다.

핵심 구분

헌법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행정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에게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과
대통령령 발령권을 인정한다. 반면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직전대통령이 되며,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② O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③ O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④ X
헌법 제90조 제2항은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을 직전대통령으로 정하고,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한다.
틀린 표현: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다만,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올바른 표현: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국가원로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혼동하게 만든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지만,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원칙적으로 직전대통령이다. 또한 예외적으로 의장을 지명하는 주체도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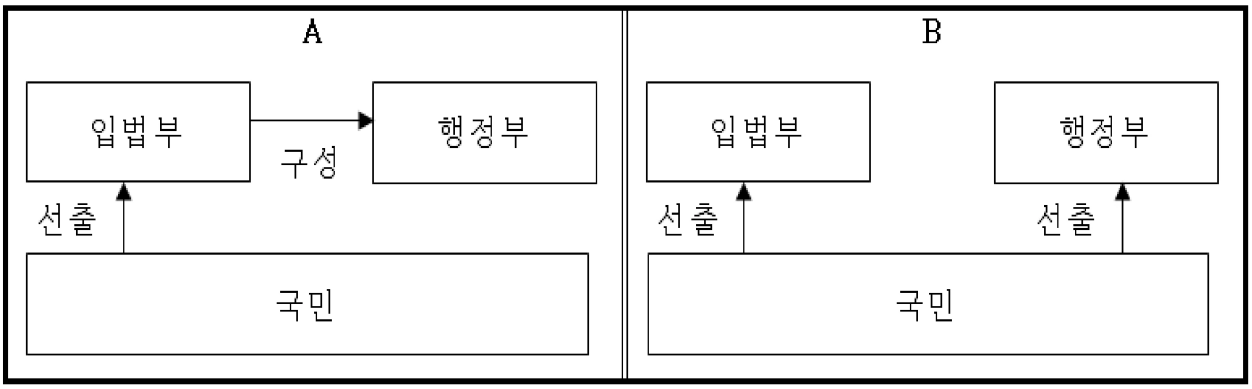
대통령 관련 기관의 의장·주재자를 묻는 문제에서는 기관별 주체를 구분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지만,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직전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 대통령이 지명한다.

암기 포인트

국무회의 의장 = 대통령,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 = 직전대통령, 직전대통령 부재 시 = 대통령이 지명한다.

NoteBase

문 2. 다음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인 A, B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의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로 융합된 일원적 정부 형태이다.

② A의 정부 형태에서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B의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하여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④ B의 정부 형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도식에서 행정부의 구성 주체와 국민의 선출 대상을 확인하여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A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이고, B는 국민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각각 선출하는 대통령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A의 의원 내각제는 의회 다수파를 기반으로 내각이 구성되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 일원적 정부 형태이다.

② O — 의원 내각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하게 결합하므로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X — B의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독립하는 권력 분립이 원칙이므로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하여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는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 등을 통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의원 내각제의 의회 해산권을 대통령제의 권한처럼 바꾼 선지이다. 대통령제의 법률안 거부권과 의원 내각제의 의회 해산권을 혼동하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민이 의회만 선출하고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면 의원 내각제, 국민이 의회와 행정부 수반을 각각 선출하면 대통령제로 판단한다. 그다음 의원 내각제는 의원의 각료 겸직과 의회 해산권,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의원 내각제는 융합·겸직·의회 해산, 대통령제는 분립·상호 독립·법률안 거부권이다.

NoteBase

문 3.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소송 절차보다 시간과 비용이 증가된다.

③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행정심판의 목적, 장점, 대상 및 심리·재결 기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신속·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권리구제 절차라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처분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정작용이다.
부작위 =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는 것이다.
재결 =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이다.

핵심 구분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로서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심사하며, 법원의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며 비용 부담이 적다. 「행정심판법」 제1조는 권리·이익의 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정하고, 제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는 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도록 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행정심판법」 제1조의 목적을 정확히 설명한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권리·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② X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며 비용 부담이 적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증가된다'는 표현이 틀리다. 틀린 표현: 행정소송 절차보다 시간과 비용이 증가된다. 올바른 표현: 행정소송 절차보다 신속·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다.
③ O —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O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시간과 비용이 증가된다'는 행정심판의 장점을 정반대로 바꾼 표현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신속·간편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정심판 문제에서는 목적, 대상, 장점, 심리·재결 기관을 차례로 확인한다. '행정소송보다 시간·비용이 더 든다'는 서술은 행정심판의 신속성·간이성·경제성과 반대이므로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신속·간편·경제적으로 구제하며, 시·도지사에 대한 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NoteBase

문 4.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가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형사보상의 대상과 청구기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보상과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피의자의 보상을 구별하고 각각의 청구기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형사보상은 구금되었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률이 정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미결구금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다.

핵심 구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일반 절차·재심·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국가에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이 보상청구는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피의자보상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일반 절차뿐 아니라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에도 국가에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X — 청구기간을 '안 날부터 1년, 확정된 때부터 3년'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이다.

③ O — 피의자보상은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도 같은 기간을 적용한다.

④ O — 헌법 제28조는 구금되었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 법률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1년·3년'과 피의자보상의 '3년'을 섞어 기억하기 쉽다. 무죄재판 확정 피고인의 보상청구기간은 인지한 날부터 3년과 확정된 때부터 5년이라는 두 제한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대상이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인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피의자인지 구별한다.
피고인이면 '안 날부터 3년·확정일부터 5년', 피의자이면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무죄 확정 피고인은 3년·5년, 불기소·불송치 피의자는 통지일부터 3년이다.

NoteBase

문 5. 「민법」이 규정한 유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②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③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다.

④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민법상 유언의 방식, 녹음유언의 요건, 증인의 결격사유 및 유언적령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유언의 증인 = 유언의 작성 과정에 참여하여 법정 방식이 지켜졌음을 확인하는 사람이다. 민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핵심 구분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한다. 제1067조에 따르면 녹음유언에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72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제1061조에 따라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유언 방식을 규정한다.
② O —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증인의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③ X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이해관계 때문에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틀린 표현: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다.'
④ O —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하므로,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설명은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될 수 있다’는 표현이 함정이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까지 증인 결격자에 포함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언 문제에서는 먼저 방식 5종, 녹음유언의 구술 사항, 증인 결격자, 17세라는 유언적령을 차례로 대조한다. 증인 선지에 수익자·배우자·직계혈족이 나오면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언 방식은 5종, 유언은 17세부터, 수익자·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 불가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사례의 경우 A 재산의 상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A는 전처와 사별한 후 여성 B와 재혼하여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하였다.
- A는 자녀 없이 어머니 C, 남동생 D와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 A는 어느 날 갑자기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 A가 남겨 놓은 재산은 총 2억 원이었다.

① B가 단독 상속하며, 상속액은 2억 원 전액이다.

② C가 단독 상속하며, 상속액은 2억 원 전액이다..

③ B, C, D가 공동으로 균등 분할하여 상속한다.

④ C, D가 공동으로 상속하며, 상속액은 각 1억 원이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권이 있는지와 직계존속·형제자매 사이의 상속순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를 구별하고, 선순위 혈족이 있으면 후순위 혈족은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법정상속인은 유언으로 별도의 지정을 하지 않아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민법상 배우자 상속인이 아니다.

사례 정리

A에게 자녀 등 직계비속은 없고, 어머니 C는 직계존속이며 남동생 D는 형제자매이다. B는 A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이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인 C가 형제자매인 D보다 우선한다.

핵심 구분

민법 제1000조에 따른 혈족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 상속권은 법률상 배우자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혼 배우자 B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선순위인 직계존속 C가 있으므로 후순위인 형제자매 D도 상속인이 되지 않고, C가 2억 원 전액을 단독 상속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B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정상속권이 없다. 틀린 표현: ‘B가 단독 상속한다.’ 올바른 표현: ‘직계존속인 C가 단독 상속한다.’
② O — 자녀와 법률상 배우자가 없고 직계존속인 어머니 C가 있으므로, C가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2억 원 전액을 단독 상속한다.
③ X — B는 사실혼 배우자라서 법정상속인이 아니고, D는 C보다 후순위인 형제자매이므로 C가 있는 한 상속인이 아니다. 틀린 표현: ‘B, C, D가 공동으로 균등 분할하여 상속한다.’ 올바른 표현: ‘C가 2억 원 전액을 단독 상속한다.’
④ X — D는 형제자매로서 직계존속 C보다 후순위이므로 C와 공동상속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C, D가 공동으로 상속하며, 상속액은 각 1억 원이다.’ 올바른 표현: ‘C가 2억 원 전액을 단독 상속한다.’

오답 포인트

‘재혼하여 동거하였다’는 생활관계만 보고 B를 법률상 배우자로 판단하거나, 한집에 산 C와 D가 함께 상속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상속 여부는 동거 사실이 아니라 혼인신고 유무와 법정상속순위로 결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혼인신고가 있는 법률상 배우자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혈족을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배열한다. 선순위 혈족이 존재하면 후순위 혈족은 제외한 뒤 상속액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권이 없고, 어머니인 직계존속은 남동생인 형제자매보다 먼저 상속한다.

NoteBase

문 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경찰공무원도 배심원이 될 수 있다.
㉤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수·권한·선정 자격, 필요적 국선변호 및 평결의 효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배심원의 의견 제시 권한과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법원을 기속한다는 것은 법원이 그 판단에 법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존중의 대상이지만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구분

㉠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는 원칙적으로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사건의 내용상 특별한 사정이 있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7인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13조).
㉡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제12조 제1항).
㉢ 국민참여재판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7조).
㉣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일반 자격을 갖추어도 변호사와 경찰공무원 등은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한다(제16조, 제18조).
㉤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제46조 제5항). 따라서 옳은 것은 ㉡과 ㉢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은 중한 대상사건의 원칙적 배심원 수를 7인으로 제시한 점이 틀리고, ㉡만 옳다. 틀린 표현: '㉠, ㉡' → 올바른 표현: '㉡, ㉣'이다.
② X — ㉣은 필요적 국선변호에 관한 옳은 설명이지만, ㉢의 변호사·경찰공무원은 배심원 선정 제외 대상이다. 틀린 표현: '㉣, ㉢' → 올바른 표현: '㉡, ㉣'이다.
③ X — ㉡은 옳지만, ㉤과 달리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 ㉤' → 올바른 표현: '㉡, ㉣'이다.
④ O — ㉡은 배심원의 의견 제시 권한을, ㉣은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의무를 정확히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의 '7인'은 일반 대상사건의 원칙과 중한 대상사건의 예외적 변경 가능성을 뒤섞은 표현이다. 또한 ㉢은 일반 자격만 보고 직업별 제외사유를 놓치게 하며, ㉤은 배심원의 의견 제시 권한을 법원에 대한 기속력으로 바꾸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배심원 수는 중한 대상사건이면 원칙적으로 9인인지 확인하고, 배심원 자격은 연령·국적의 일반 요건뿐 아니라 직업별 제외사유까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배심원에게 의견 제시 권한은 있지만 그 평결과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리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중한 사건 9인, 배심원은 의견 제시, 평결은 비기속, 변호인 없으면 직권 선정이다.

NoteBase

문 8.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인 갈등론과 기능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갈등론: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의 존속과 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서 사회 전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

② 기능론: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기능적 체계로 보며, 살아 있는 생물 유기체에 비유한다.

③ 갈등론: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 갈등 현상을 간과하고, 사회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나 권력 관계의 유지에 기여하는 보수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④ 기능론: 사회에는 돈, 권력, 명예, 지위 등과 같은 희소가치를 획득한 지배 집단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 간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기능론과 갈등론이 사회의 질서, 갈등, 희소가치의 분배를 각각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능론: 사회를 상호 의존하는 구성 요소들이 전체의 존속과 통합에 기여하는 하나의 유기체적 체계로 본다. 핵심 키워드는 기능, 상호 의존, 안정, 질서, 합의이다.
갈등론: 사회를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대립하는 체계로 본다. 핵심 키워드는 불평등, 지배, 갈등, 강제, 사회 변동이다.
기능론은 질서와 통합을, 갈등론은 불평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사회를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갈등론’이라는 이론명이 틀렸다. 사회 구성 요소들이 상호 연관되어 사회 전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올바르게는 ‘기능론: 사회의 각 구성 요소는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의 존속과 통합에 기여한다’이다.

② O
사회를 통합된 기능적 체계로 파악하고 생물 유기체에 비유하는 것은 기능론의 대표적인 관점이다. 각 부분이 서로 의존하며 전체 사회의 유지에 기여한다고 본다.

③ X
‘갈등론’이라는 이론명이 틀렸다.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갈등과 변동을 간과하고 기존 질서를 옹호한다는 비판은 기능론을 향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기능론은 사회 갈등과 변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기존 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보수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이다.

④ X
‘기능론’이라는 이론명이 틀렸다. 돈, 권력, 명예, 지위와 같은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로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올바르게는 ‘갈등론은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갈등을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현상으로 본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 ③, ④는 설명 내용 자체보다 앞에 붙은 이론명을 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특히 ③의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표현은 갈등론의 특징이 아니라 기능론에 대한 대표적 비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서·통합·합의·상호 의존·유기체가 보이면 기능론으로, 희소가치·불평등·지배와 피지배·갈등·변동이 보이면 갈등론으로 판단한다. 선지의 설명과 앞에 붙은 이론명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기능론은 질서와 통합, 갈등론은 불평등과 변동이다.

NoteBase

문 9. 다음 글에 나타난 문화 이해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귀여운 아이를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애정을 표현한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으나 예전에는 귀여운 남자 아기를 보면 동네 어른들이 “어디 고추 한 번 볼까?”하고 장난을 걸기도 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어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가 큰 실례이며, 심지어 미국에서는 한인 남성이 동네의 어린 아기를 귀여워하며 “어디 고추 한 번 볼까?”라고 했다가 부모로부터 신고 당해 재판까지 간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나는 자신의 아이가 소중하다는 이유로 이웃 간에 최소한의 애정 표현조차 허용되지 않는 저들의 문화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① 문화 사대주의
② 문화 상대주의
③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④ 자문화 중심주의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글쓴이는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우리나라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태국과 미국의 다른 문화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은 자기 문화의 관습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했다는 점이다.

핵심 개념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우월하거나 당연한 기준으로 삼아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이다. 반면 문화 상대주의는 각 문화를 그 사회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태도이다.

적용 기준

다른 문화가 낯설다는 사실 자체보다 무엇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글쓴이는 태국과 미국의 문화를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애정 표현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문화 사대주의는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고 다른 사회의 문화를 더 우월하게 여기는 태도이다. 이 글은 외국 문화를 우월하게 보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문화 사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로 고쳐야 한다.
② X —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그 문화가 형성된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글쓴이는 태국과 미국의 관습을 그 사회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문화 상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로 고쳐야 한다.
③ X —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관습까지 무조건 인정하려는 태도이다. 글쓴이는 타 문화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로 고쳐야 한다.
④ O — 글쓴이는 우리나라의 애정 표현을 기준으로 삼아 태국과 미국의 다른 관습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는 자기 문화를 판단의 중심에 두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오답 포인트

글에 여러 나라의 문화 차이가 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② 문화 상대주의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문화 차이를 소개하는 것과 그 차이를 각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저들의 문화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타 문화를 자기 문화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낮게 평가하면 자문화 중심주의, 외국 문화를 우월하게 여기며 자기 문화를 낮추면 문화 사대주의, 각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문화 상대주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내 문화가 판단 기준이면 자문화 중심주의, 남의 문화가 우월하면 문화 사대주의, 그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문화 상대주의이다.

NoteBase

문 10. 사회실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를 개인의 단순한 합 이상이라고 보며,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독립적 실체라고 보는 관점이다.

② 사회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며, 개인만이 실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③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사회계약설과 관련이 깊다.

④ 개인을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존재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을 사회와 개인 중 어느 쪽의 실재성과 영향력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실재론은 사회가 개인의 단순한 합을 넘어 독자적인 성격과 구속력을 지닌 실체라고 보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사회 우선', '전체성', '개인에 대한 사회의 영향'이다.
사회명목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이며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이름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개인 우선', '개인의 능동성', '사회계약설'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사회를 개인의 단순한 합 이상이며 개인의 특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독립적 실체로 보는 것은 사회실재론의 핵심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개인만이 실재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사회실재론이 아니라 사회명목론에 대한 설명이며, 사회실재론은 사회 자체의 독자적 실재성을 인정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사회계약설이 사회실재론과 관련이 깊다는 취지이다. 사회계약설은 개인들의 합의로 사회가 형성된다고 보므로 개인을 우선하는 사회명목론과 관련이 깊다.
④ X — 틀린 표현은 사회실재론이 사회의 개인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부분이다.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하지만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사회명목론의 한계이며, 사회실재론은 오히려 사회의 구속력과 영향력을 강조한다.

오답 포인트

②~④는 모두 사회명목론의 정의·사상적 배경·한계를 사회실재론의 특징처럼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특히 '개인의 능동성'이라는 표현만 보고 ④를 고르면 두 관점이 뒤바뀐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가 개인을 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면 사회실재론, 개인만이 실재하고 사회는 개인들이 만든 명칭이나 결과라는 내용이면 사회명목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실재론은 '사회가 개인보다 우선', 사회명목론은 '개인이 사회보다 우선'이다.

NoteBase

문 11. 사회병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변동으로 인해 기존 사회조직이 해체되면서 사회통제장치들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사회문화로 인식한 이론이다.

②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화의 실패에서 찾는 이론이다.

③ 사회적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 사이의 불일치 상태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④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분업이 보편화되고, 친밀감과 연대를 약화시켜 무규범상태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사회병리론을 사회해체론 및 아노미론과 구별하고, 각 이론의 사회문제 발생 원인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사회병리론: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보고, 구성원이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제대로 내면화하지 못한 사회화의 실패에서 사회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사회해체론: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기존 사회조직과 규범, 사회통제 장치가 약화되거나 붕괴하여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머튼의 아노미론: 사회가 강조하는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합법적 수단 사이의 괴리가 일탈을 낳는다고 본다.
뒤르켐의 아노미론: 산업화와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전통적 연대와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된 무규범 상태에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사회변동으로 기존 사회조직이 해체되고 사회통제 장치가 기능을 잃는다는 설명은 사회해체론에 해당한다. 틀린 부분은 이 설명을 사회병리론과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기존 조직과 통제 장치가 약화되어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사회해체론의 설명이다.

② O
사회병리론은 개인이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제대로 내면화하지 못한 사회화의 실패를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본다. 따라서 사회병리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③ X
사회적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의 불일치를 원인으로 제시한 것은 머튼의 아노미론이다. 틀린 부분은 이 설명을 사회병리론과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합법적 수단 사이의 괴리가 일탈을 낳는다'는 머튼의 아노미론이다.

④ X
산업화와 분업의 확산으로 전통적 친밀감과 연대 및 규범적 통제가 약화되어 무규범 상태가 나타난다는 설명은 뒤르켐의 아노미론에 해당한다. 틀린 부분은 이 설명을 사회병리론과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급격한 산업화로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아노미가 발생한다'는 뒤르켐의 아노미론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모든 선지가 사회문제를 사회의 질서와 규범 문제로 설명하므로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①은 조직과 통제 장치의 해체, ③은 목표와 합법적 수단의 괴리, ④는 산업화에 따른 무규범 상태가 핵심이고, 사회병리론의 직접적인 표지는 ②의 '사회화의 실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화 실패'이면 사회병리론, '조직·통제 장치의 붕괴'이면 사회해체론, '목표와 합법적 수단의 괴리'이면 머튼의 아노미론, '산업화·급격한 변동에 따른 무규범'이면 뒤르켐의 아노미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병리론 = 사회화 실패, 사회해체론 = 통제 붕괴, 머튼 = 목표·수단 괴리, 뒤르켐 = 무규범 상태이다.

NoteBase

문 12.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유성: 문화는 언어·문자 등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축적·계승된다.

② 총체성: 문화의 각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전체적으로 통합성을 가진다.

③ 학습성: 문화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지만 성장을 통해서도 학습된다.

④ 특수성: 모든 사회나 시대의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화의 공유성·총체성·학습성·축적성·보편성·특수성을 각각의 핵심 의미와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유성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문화를 공동으로 향유하는 속성이고, 총체성은 문화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속성이다. 학습성은 문화가 후천적인 사회화를 통해 습득되는 속성이며, 축적성은 문화가 언어와 문자 등을 통해 세대 간에 전승되면서 새로운 내용이 더해지는 속성이다. 보편성은 모든 사회의 문화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속성이고, 특수성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문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속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공유성'이다. 언어·문자 등을 통해 문화가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누적된다는 설명은 축적성에 해당한다. 공유성은 같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문화를 함께 향유한다는 뜻이다.
② O — 문화의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통합된 전체를 이룬다는 설명은 총체성에 해당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선천적으로 물려받지만'이다. 문화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의 사회화와 상호 작용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
④ X — 틀린 부분은 '특수성'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의 연결이다. 모든 사회나 시대의 문화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성질은 보편성이고, 특수성은 문화가 사회와 시대에 따라 고유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성질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세대 간 전승이라는 말 때문에 공유성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핵심은 문화가 쌓인다는 축적성이다. ④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반대로 연결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함께 누리면 공유성, 세대를 거치며 쌓이면 축적성, 배우면 학습성, 요소들이 연결되면 총체성, 모든 문화에 공통이면 보편성, 사회·시대마다 다르면 특수성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함께는 공유, 쌓이면 축적, 배우면 학습, 연결되면 총체, 공통이면 보편, 다르면 특수이다.

NoteBase

문 13. 로스토(W. Rostow)의 단계적 경제 발전 과정 중 제4단계(성숙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와 국민들이 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②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 기술의 혁신을 가져와 농업이 상업화된다.

③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업이 일어나고 국제 경제에서 안정된 위치를 확보한다.

④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경제의 주축이 되는 단계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스토의 경제 발전 5단계 가운데 제4단계인 성숙 단계의 특징을 다른 단계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로스토는 경제 발전을 전통 사회 → 도약 준비 단계 → 도약 단계 → 성숙 단계 → 고도 대중 소비 단계로 설명한다. 성숙 단계에서는 현대적 기술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산업이 다양해지며, 새로운 공업이 성장하여 국제 경제에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국가와 국민이 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전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제2단계인 도약 준비 단계의 특징이다. 틀린 표현은 '제4단계'와의 연결이며, 올바르게는 '제2단계인 도약 준비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② X — 공업화의 진전과 함께 농업 기술이 혁신되고 농업이 상업화되는 것은 본격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약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이를 '성숙 단계의 대표 특징'으로 본 것이며, 올바르게는 '도약 준비 단계에서 도약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의 특징'이다.

③ O — 성숙 단계에서는 기술 혁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어 새로운 공업이 발달하고 산업 구조가 다변화되며, 국제 경제에서 안정된 위치를 확보한다.

④ X —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경제의 주축이 되는 것은 제5단계인 고도 대중 소비 단계의 특징이다. 틀린 표현은 '제4단계'와의 연결이며, 올바르게는 '제5단계인 고도 대중 소비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②의 공업화와 ④의 소비재·서비스 산업도 발전한 경제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성숙 단계의 결정적 표지는 현대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 산업의 다양화, 국제 경제에서의 안정된 지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계별 핵심어를 연결해 판단한다. 발전 필요성 인식은 도약 준비, 본격적 공업화는 도약, 기술의 전면적 확산과 산업 다양화는 성숙, 내구소비재·서비스 중심은 고도 대중 소비에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성숙 단계 = 기술 확산·산업 다양화·국제적 안정, 고도 대중 소비 단계 = 소비재·서비스 중심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단,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다.)

갑이 운영하는 분식점의 월세는 300만 원, 종업원의 월급은 300만 원, 재료비 등 기타비용은 월 400만 원이다. 갑이 다른 식당에 취업하였을 경우 ⓐ월 300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갑의 분식점 월수입은 1,500만 원이다.

<보기>

㉠ ⓐ는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 갑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이윤은 100만 원이다.

㉢ 갑은 분식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갑이 분식점을 운영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1,300만 원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하여 기회비용을 구하고,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으로 영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월수입은 1,500만 원이다.
명시적 비용은 월세 300만 원, 종업원 월급 300만 원, 기타비용 400만 원의 합계 1,000만 원이다.
암묵적 비용은 다른 식당에 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 300만 원이다.

사용할 공식

기회비용 = 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
경제적 이윤 = 수입 - 기회비용
다른 식당에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실제로 지출한 돈은 아니지만 분식점 운영을 선택하면서 포기한 소득이므로 암묵적 비용에 포함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명시적 비용은 3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1,000만 원이다.
2. 기회비용은 1,000만 원 + 300만 원 = 1,300만 원이다.
3. 기회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이윤은 1,500만 원 - 1,300만 원 = 200만 원이다. 경제적 이윤이 양수이므로 분식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 ㉢, ㉣은 옳고 ㉡은 옳지 않다.

선지 판단

① X — ㉠과 ㉢은 옳지만 ㉡의 '이윤은 100만 원'이 틀렸고, 옳은 ㉣도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경제적 이윤이 200만 원이며 옳은 설명의 조합은 ㉠, ㉢, ㉣이다.

② X — ㉠과 ㉣은 옳지만 ㉡의 '이윤은 100만 원'이 틀렸고, 옳은 ㉢이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경제적 이윤이 200만 원이므로 분식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조합은 ㉠, ㉢, ㉣이다.

③ O — ㉠의 포기한 임금 300만 원은 암묵적 비용이고, 경제적 이윤이 200만 원으로 양수이므로 ㉢이 성립하며, 명시적 비용 1,000만 원과 암묵적 비용 300만 원을 합한 기회비용이 1,300만 원이므로 ㉣도 성립한다.

④ X — ㉢과 ㉣은 옳지만 ㉡의 '이윤은 100만 원'이 틀렸고, 옳은 ㉠이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포기한 임금 300만 원이 암묵적 비용이고 경제적 이윤은 200만 원이므로 조합은 ㉠, ㉢, ㉣이다.

오답 포인트

회계적 이윤과 경제적 이윤을 혼동하기 쉽다.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만 빼면 500만 원이지만, 경제적 이윤은 여기에 포기한 임금 300만 원까지 비용으로 반영하여 200만 원이 된다. 특히 ㉡의 100만 원이라는 수치는 주어진 비용을 정확히 합산하지 않은 값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 지출인 명시적 비용을 합하고, 선택 때문에 포기한 소득인 암묵적 비용을 더해 기회비용을 구한다. 그다음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빼 경제적 이윤의 부호로 선택의 합리성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고, 경제적 이윤이 양수이면 현재 선택을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NoteBase

문 15. 100원을 가진 갑은 다음 A, B프로젝트 중 B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프로젝트 연간 예상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프로젝트 기간은 1년이다. 예상수익률=예상수익÷투자자금)

· A프로젝트는 100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연 1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 B프로젝트는 200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부족한 돈은 연 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① 5.6%
② 6.1%
③ 6.6%
④ 7.6%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차입금을 포함해 투자할 때에는 프로젝트의 예상수익에서 차입이자를 뺀 순수익을 자기자금으로만 투자할 때의 수익과 비교한다.

조건 정리

A프로젝트의 투자금은 100원이고 예상수익률은 10%이므로 연간 예상수익은 10원이다.
B프로젝트의 투자금은 200원이며, 갑의 자기자금 100원 외에 100원을 연 5%로 빌려야 하므로 연간 이자는 5원이다.
B프로젝트의 예상수익률을 r이라 하면, 갑에게 남는 순수익은 $200r - 5$원이다.

사용할 공식

B프로젝트 선택이 합리적이려면 B의 순수익이 A의 수익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200r-100×0.05≥100×0.10
차입금으로 투자 규모를 늘렸으므로 총 예상수익에서 차입이자를 차감하여 비교해야 한다.

계산 과정

A프로젝트의 예상수익은 $100 \times 0.10 = 10$원이다.
B프로젝트의 차입이자는 $100 \times 0.05 = 5$원이다.
따라서 200r-5≥10이고, 이를 풀면 r≥0.075=7.5\%이다. 임계수익률은 7.5%이며, 주어진 선지 중 이를 충족하는 최저 수익률은 7.6%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5.6%이면 B의 순수익은 200 × 0.056 − 5 = 6.2원으로 A의 10원보다 작다. 틀린 5.6%는 7.5%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6.1%이면 B의 순수익은 200 × 0.061 − 5 = 7.2원으로 A보다 불리하다. 틀린 6.1%는 7.5%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6.6%이면 B의 순수익은 200 × 0.066 − 5 = 8.2원으로 A의 수익에 미치지 못한다. 틀린 6.6%는 7.5%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7.6%이면 B의 순수익은 200 × 0.076 − 5 = 10.2원으로 A의 10원보다 크다. 주어진 선지 가운데 합리적 선택 조건을 충족하는 최저 수익률이다.

오답 포인트

B의 총투자금 200원에 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 빌린 100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5원을 반드시 차감해야 한다. 또한 7.5%는 계산으로 구한 임계값이고, 선지에서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가장 작은 값인 7.6%를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차입 투자안은 '총투자수익−차입이자'로 순수익을 구한 뒤 대안의 수익과 비교한다. 먼저 임계수익률을 계산하고, 그다음 선지 중 임계값 이상인 가장 작은 값을 찾는다.

암기 포인트

차입 투자 비교의 기준은 총수익이 아니라 이자를 뺀 순수익이다. 이 문항의 임계수익률은 7.5%, 선지의 답은 7.6%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표는 한 기업의 X재 판매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판매량(개)	1	2	3	4	5
평균 수입(원)	100	100	100	100	100
총비용(원)	200	300	350	400	420

① 총이윤(손실)은 판매량이 2개일 경우와 3개일 경우에 같다.

② 판매량이 증가하여도 기업의 총수입은 일정하다.

③ 판매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증가한다.

④ 판매량이 5개일 경우 총이윤은 80원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평균 수입으로 총수입을 구한 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 총이윤을 계산하고, 총비용의 증가분으로 추가 비용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판매량은 1개부터 5개까지이고 평균 수입은 판매량마다 100원이다. 총비용은 차례로 200원, 300원, 350원, 400원, 42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판매량별 총수입·총이윤과 판매량이 1개 늘 때의 총비용 증가분이다.

사용할 공식

총수입=평균 수입×판매량
총이윤=총수입-총비용
추가 비용=판매량 증가 후 총비용-판매량 증가 전 총비용
평균 수입은 상품 1개당 수입이므로 판매량을 곱하면 총수입이 된다. 총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고, 추가 비용은 연속한 판매량 사이의 총비용 차이로 구한다.

계산 과정

판매량이 1개, 2개, 3개, 4개, 5개일 때 총수입은 각각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이다. 따라서 총이윤은 각각 -100원, -100원, -50원, 0원, 80원이다. 판매량이 1개에서 2개, 2개에서 3개, 3개에서 4개, 4개에서 5개로 늘 때 추가 비용은 각각 100원, 50원, 50원, 2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판매량이 2개일 때 총이윤은 200원-300원=-100원이고, 3개일 때는 300원-350원=-50원이므로 같지 않다. 틀린 표현 '같다'는 '2개일 때 -100원, 3개일 때 -50원으로 다르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평균 수입은 100원으로 일정하지만 총수입은 평균 수입에 판매량을 곱하므로 판매량이 1개 늘 때마다 100원씩 증가한다. 틀린 표현 '총수입은 일정하다'는 '평균 수입은 일정하지만 총수입은 증가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판매량이 1개씩 늘 때 추가 비용은 확인 가능한 구간에서 100원, 50원, 50원, 20원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증가한다'는 '추가 비용은 대체로 감소하며 2개에서 3개와 3개에서 4개로 늘 때는 각각 50원으로 같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판매량이 5개이면 총수입은 100원×5=500원이고 총비용은 420원이므로 총이윤은 500원-420원=80원이다.

오답 포인트

평균 수입 100원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총수입도 일정하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총수입은 평균 수입에 판매량을 곱하며,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다. 또한 ③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총비용 자체가 아니라 판매량이 1개 늘 때의 총비용 증가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판매량별 총수입을 먼저 계산하고, 총이윤은 총수입-총비용으로 구한다. 추가 비용은 총비용 행의 연속한 두 값을 빼서 변화 방향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총수입=평균 수입×판매량, 총이윤=총수입-총비용, 추가 비용=총비용의 증가분이다.

NoteBase

문 17.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상 수지는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는데,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을 의미한다.

② 국제 수지표는 그 거래의 내용을 자산수지와 국제·금융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③ 이전 소득 수지는 임금이나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이를 보여 준다.

④ 본원 소득 수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는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이를 보여 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국제 수지의 주요 구성 항목과 본원 소득 수지·이전 소득 수지의 구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제 수지는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이다.
본원 소득 수지는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임금·투자 소득 등을 기록하고, 이전 소득 수지는 대가 없이 주고받은 송금·무상 원조 등을 기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로 구성되므로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자산수지와 국제·금융 계정'이다. 국제 수지표의 주요 항목은 경상 수지, 자본 수지, 금융 계정 등으로 구분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이전 소득 수지'이다. 임금이나 투자로 발생한 소득의 수취와 지급 차이는 본원 소득 수지에 기록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본원 소득 수지'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는 외화의 수취와 지급 차이는 이전 소득 수지에 기록된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본원 소득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의 내용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 '생산요소 제공의 대가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서비스 거래인지, 임금·투자 소득처럼 대가가 있는 소득인지, 송금·무상 원조처럼 대가 없는 이전인지 차례로 확인한다. 대가가 있는 소득은 본원 소득 수지, 대가 없는 이전은 이전 소득 수지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본원 소득은 노동·자본의 대가, 이전 소득은 대가 없는 이전이다.

NoteBase

문 18. <보기>에서 ㉠,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보기>
다른 조건들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하는 일본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하고, 수출하는 한국 상품의 엔화 표시 가격은 (㉡)한다.

① ㉠하락, ㉡하락
② ㉠하락, ㉡상승
③ ㉠상승, ㉡하락
④ ㉠상승, ㉡상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할 때 일본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과 한국 상품의 엔화 표시 가격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환율 E는 1엔과 교환되는 원화의 양, 즉 원/엔 환율이다.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으므로 일본 상품의 엔화 가격과 한국 상품의 원화 가격은 일정하다. 구해야 할 것은 E가 상승할 때 두 상품의 상대국 통화 표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이다.

사용할 공식

일본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E \times$ 일본 상품의 엔화 가격이다. 한국 상품의 엔화 표시 가격은 한국 상품의 원화 가격 $\div E$이다. 환율이 곱해지는 수입품의 원화 가격은 환율과 같은 방향으로, 환율로 나누는 수출품의 엔화 가격은 환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계산 과정

1. E가 상승하면 일정한 엔화 가격에 곱해지는 환율이 커지므로 일본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한다.
2. 한국 상품의 원화 가격은 일정한데 이를 더 커진 E로 나누므로 한국 상품의 엔화 표시 가격은 하락한다.
3. 따라서 ㉠은 상승, ㉡은 하락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의 '하락'이 틀렸다. 원/엔 환율이 상승하면 일본 상품을 같은 엔화 가격에 수입하더라도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은 '상승'이 된다. ㉡은 '하락'이 맞다.
② X — ㉠의 '하락'과 ㉡의 '상승'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 '상승', ㉡ '하락'이다.
③ O — 원/엔 환율 상승은 일본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상승시키고, 한국 상품의 엔화 표시 가격을 하락시킨다.
④ X — ㉡의 '상승'이 틀렸다. 한국 상품의 원화 가격을 더 높은 원/엔 환율로 나누므로 ㉡은 '하락'이 된다. ㉠은 '상승'이 맞다.

오답 포인트

환율 상승을 두 상품의 표시 가격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함정이다. 일본 상품의 원화 가격에는 환율을 곱하지만 한국 상품의 엔화 가격은 환율로 나누므로 두 가격의 변화 방향은 반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환율을 '외국 통화 1단위당 원화의 양'으로 풀어 쓴다. 외국 상품을 원화로 바꿀 때는 환율을 곱하고, 국내 상품을 외국 통화로 바꿀 때는 환율로 나눈 뒤 증감 방향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원/외화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원화 가격 상승, 수출품의 외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19. 경상 수지 흑자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민소득 증가

② 국내 실업 증가

③ 국내 통화량 감소

④ 외국인 투자 감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경상 수지 흑자가 국내 생산·고용·소득과 외환·통화 부문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상 수지 흑자는 상품·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를 합한 경상 수지의 수입이 지급보다 큰 상태이다. 수출 증가로 흑자가 확대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총수요와 국내 생산이 늘어 국민 소득과 고용이 증가한다. 또한 외화의 순유입은 외환 시장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 상승 압력을 만들며, 유입 외화를 통화 당국이 매입하고 이를 불태화하지 않으면 국내 통화량에는 증가 압력이 생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수출 증가에 따른 경상 수지 흑자는 순수출과 총수요를 늘려 국내 생산을 확대하므로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국내 실업 증가'이다. 생산과 수출이 확대되면 노동 수요와 고용이 늘어나므로 일반적으로 국내 실업은 감소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국내 통화량 감소'이다. 경상 수지 흑자로 유입된 외화를 통화 당국이 매입하고 불태화하지 않으면 본원 통화가 공급되므로 국내 통화량에는 증가 압력이 생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외국인 투자 감소'이다. 외국인 투자는 수익성, 금리, 환율 전망 등에도 좌우되므로 경상 수지 흑자만으로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제 수지의 대응 관계에서 경상 수지 흑자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한 나라의 순대외자산 증가이다.

오답 포인트

경상 수지 흑자를 단순히 '외화가 많아지는 현상'으로만 보면 ③이나 ④를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은 수출 확대형 흑자가 순수출과 총수요를 늘려 국민 소득과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며, 외국인 투자의 증감은 경상 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상 수지 흑자의 효과는 '순수출 증가 → 총수요 증가 → 생산·국민 소득·고용 증가'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외환·통화 효과는 환율 제도와 통화 당국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감소 표현은 피한다.

암기 포인트

경상 수지 흑자: 순수출 증가, 국민 소득·고용 증가, 순대외자산 증가이다.

NoteBase

문 20.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②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감소와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③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실질 GDP가 감소한다.

④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불황)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플레이션의 일반적 의미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증가로 발생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생산비 상승 등에 따른 총공급 감소로 발생한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질 GDP가 감소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증가로'이다. 총수요 증가로 발생하는 것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 등 생산비 상승으로 총공급이 감소할 때 발생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인플레이션은 …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디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③ O — 비용 상승으로 총공급이 감소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생산량은 줄어들므로 실질 GDP가 감소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경기 침체에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의 정의로 제시한 부분이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바꾸었고, ②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뒤바꾸었다. ④는 인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의 특징을 제시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인과 결과를 나누어 판단한다. 총수요 증가이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생산비 상승과 총공급 감소이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물가의 지속적 하락은 디플레이션, 불황과 물가 상승의 동시 발생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수요 증가는 수요 견인, 비용 증가는 비용 인상, 불황과 물가 상승의 동행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NoteBase